국힘 당권경쟁 한동훈·나경원·원희룡·윤상현 '각축'

한동훈, 23일 출마선언 외연 확장
나경원, 한동훈과 1대1 구도 노려
원희룡, 친윤계 지원 '당정일체론'
윤상현, '혁신 이미지' 부각 나서

국민의힘 차기 당권경쟁이 본격화하면서 한동훈·나경원·원희룡·윤상현 등 당권 주자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당권 도전 의사를 밝혔다. 원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을 지냈고,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전면에서 방어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마땅한 '대항마'가 없는 친윤(친윤석열)계가 원 전 장관을 지원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 전 장관은 출마 결심을 밝히면서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당정일체론'을 앞세웠다.

윤석열 대통령과 불화설이 약한 고리로 지목되는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친윤 그룹이 나 의원과 원 전 장관을 동시 지원하며 '반한 전선'을 넓히려 하는 것 아니냐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나 의원과 원 전 장관이 '느슨한 연대'로 1차 투표에서 한 전 위원장의 과반 득표를 저지한 뒤, 결선투표에서 '한동훈 대 반(反)한동훈'의 1대1 구도를 만들어 한 전 위원장의 대표 선출을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 의원은 이 같은 계파 구도나 정치공학적 접근에 거리를 두면서 "오직 친(親) 국민, 친 대한민국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채널A '정치시그널'에서 당권 도전에 대해 "마지막 고심 중"이라며 "다만 표를 구하는 사람으로는 친윤 표도, 반윤 표도, 비윤 표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론 조사상 선두에 나설 것으로 평가받는 한 전 위원장은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설 태세다.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은 오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예정된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선언을 앞두고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원외 인사인 한 전 위원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당 현역 의원 사이 지지세를 넓히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광재 대변인 등 일부 인사들이 당직을 사퇴하고 한 전 위원장 측에 합류하는 등 캠프 몸집을 키우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장동혁 의원은 MBN 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에 출연, "구도를 봤을 때 지난번 전당대회만큼 조직의 힘이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많다"면서도 "전대 과정에서 어떻게든 그런 힘도 모으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그게 한 전 위원장의 또 하나의 숙제"라고 말했다.

이들 외에도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윤상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보수혁신 세미나를 개최하며 '혁신' 이미지 부각에 나설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의원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제폭력방지법 정책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뒤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 당론 발의

국민의힘은 20일 정부의 저출생 대책 발표에 발맞춰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남성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등을 골자로 한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데 따라 여당이 입법 지원에 나선 것이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은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4개 법안의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했다.

고용보험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고 분할사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임신한 여성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 내용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과 같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정부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돌봄 인력의 국가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4개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정재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과 육아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국가와 사회 전체가 책임진다'는 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필수 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당론 발의했다. 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필수 의료·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인프라 육성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이 잇따라 당론으로 민생 법안을 발의했지만, 원 구성을 두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면서 해당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해야 하지만,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해 상임위 참여를 '보이콧'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대책을 두고도 "대부분 과거에 내놓은 대책들을 재탕·삼탕한 것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연합뉴스

尹 "3조4000억 규모 영일만 횡단고속도 추진"

경북 경산서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3조4000억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고, 경주에 3000억원 규모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경산 영남대학교에서 26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조국 근대화의 성취를 이끌었던 저력을 바탕으로 경북이 더 크게 도약하고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방에서 민생토론회를 연 것은 지난 3월 충북 토론회 이후 약 석 달 만이다.

윤 대통령은 경북 청도군 신도리 마을이 발상지인 새마을운동을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의 지방발전정책도 새마을운동 정신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며 "8000억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사업을 지원해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또 "원전산업 성장 펀드 조성과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경주에 3000억원 규모의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신한울 3·4호기를 차질없이 건설해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과 신산업화에 경북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산단을 반도체 소재부품의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1차로 2026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설계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R&D) 실증센터'를 만들겠다"고 했다.

경북의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정책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3조4000억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고,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도 더욱 속도를 내서 경북과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또 "만성 정체 구간인 국도 7호선 경주-울산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까지 확장하는 계획도 확실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경북을 스타트업 기업과 스마트팜의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비전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00억원을 투입해 경산에 스타트업 파크와 포항에 첨단제조 인큐베이팅센터 등을 구축하고, 300억원 규모의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만들겠다"며 "경북을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이어 "경북을 스마트팜의 거점으로 키우고 혁신농업타운 성공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며 "2500억원 규모의 농림부 첨단 스마트팜 지원 예산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경북은 6·25전쟁의 역사가 깊이 새겨진 곳"이라며 "경북을 호국보훈의 성지로 육성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싸워준 유엔군을 추모하기 위해 200억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포항시에 환동해호국문화역사관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구~경북 통합 논의를 언급하면서 "경북~대구 통합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SINCE 1952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